

‘버닝키 쇼크’

여전히 고장 난 자본주의

2면

안토니오 그람시

혁명의
삶과 유산

8~9면

학교비정규직

투쟁과
연대의 목소리

4면

진주의료원

국립화를 위해
투쟁하자

6면

존 몰리뉴 신간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12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인식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07호 | 2013년 6월 24일 ~ 7월 14일 | 값 1,800원

신문사 사정으로 다음 신문은 3주 후인 7월 15일에 발행됩니다.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뒤집 안 된다

이 글은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지저분한 글과 역겨운 악성 댓글을 달았다.

지금 조중동은 선거 개입 관련 글이 고작 73건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사기친다. 그러나 국정원이 글을 삭제하면서 실수로 남긴 것만 73건일 뿐이다. 국정원이 만든 아이디 개수 등을 볼 때 ‘국정원 악플’의 개수는 수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런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대선 투표 직

전에 “지지·비방 댓글이 없다”며 진실을 덮어 버렸다.

그러나 덮어 둔다고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이 사라질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또 덮기 힘든 처지였다. 부패우파의 오물 처리반 구실을 너무 자주 해서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 했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대놓고 나서서 원세훈을 감싸며 검찰을 압박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의 일부만 밝히며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뉘저리를 끝냈다.

그러나 어설픈 뉘저리 이후 의혹과 분노의 화살은 이제 원세훈·김용판 뒤에 있는 몸통을 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가 국정원, 경찰과 수시로 협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 찬탈”로 규정했다.

▶ 3면으로 이어짐



철도 분할 민영화 막아내자

▶ 관련 기사 5면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누구의 말일까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합의를 하겠냐. 구조조정이 일방적이지 그럼 쌍방적이나?”

중앙대 인문사회계열 부총장 김호섭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덕 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

새누리 원내대표 최경환, 제정신?

“오늘쯤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사건 경찰 발표를 30분 전에 예언한 박근혜 대변인 박선규

“70명이 이런 정도의 글을, 이 정도 분량밖에 안 썼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정원의 직무유기”

새누리당 김학용, 이 정도 댓글도 부족하다?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거 아냐.”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지난해 대선 때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의 대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사건”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김태홍의 기상천외

“검찰 수사에 외압 있다면 몸으로 막을 것”

온몸으로 검찰 수사 방해하던 법무장관 황교안

“이정희 뽕고 싶다. ... 마취 없이 덧니를, 머리끄덩이를”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달았던 댓글 중

“박 후보가 잘못해서 토론이 엉망진창됐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간을 판같이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토론회 끝나고 국정원 2차장 차문화가 했다는 말

“반대 짝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자살한 KT 노동자가 폭로한 사측의 선거 개입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1퍼센트대고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배경에는 세계경제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계속해서 수축하고 있고,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딪치며 일본발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양적완화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이 폭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양적완화 축소 위기감 이후에 6월 10일부터 1주일간 한국에서 외국인 증시 이탈자금은 3조 6천억 원으로 아시아 최대였다. 한국 경제의 기동이라는 삼성전자 주가가 7일 동안에 11.1퍼센트나 급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난 봄에 발표한 경기부양책들은 금세 약발이 떨어졌다. 1사분기 설비투자는 11.9퍼센트가 감소했다. 낮은 투자는 고용,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줄어든 자산만큼 부채를 줄여야 하고 이것이 소비와 투자를 더욱 줄여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낮은 이윤율의 위기는 해결되기커녕 더 심화하고 있다. 올해 상위 5개 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6.5퍼센트에서 2012년 4.2퍼센트로 줄었다. 기업의 15퍼센트가 이자도 못 갚는 상태다.

고통전가

게다가 낮아지는 성장률 때문에 4월까지 세수(稅收)도 지난해에 비해 8조 7천억 원이 감소해 정부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며 경제를 부양했던 땀집식 처방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도 이들처럼!

숫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6퍼센트 전후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낮은 금리의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과잉 투자가 나타났고, 이 돈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거품이 꺼지면서 지방 정부들은 파산할 위험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경제 성장, 민생 개선, 공정사회 건설’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지배자들은 이것을 이



문제는 자본주의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양적완화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위기.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와 복지 공약 후퇴, 공공요금 인상,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등으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용산 개발 파산으로 철도공사의 부채가 늘자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늘자 물값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지방정부

양적완화 3조 달러도 고치지 못 한 ‘고장 난 자본주의’

6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버냉키가 연내에 ‘양적완화’를 줄이기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세계 각국의 주식·채권 가격이 하락하고(금리 인상),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때마침 중국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시중에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다. 이 돈은 선진국에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하는 데 사용됐다.

이렇게 풀린 돈은 전 세계로도 흘러 들어갔다. 2009년 이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흘러든 돈이 1조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끝없는 돈 풀기가 경기 회복보다는 거품의 크기와 위험성만 키우면서 불안정성도 커졌다. 그러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달러를 회수할 때가 됐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회수는 가뜩이나 취약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뜩이나 취약해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저성장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이중의 탓에 간헐 이리지도 저러지

의 부채 위기가 심하니까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가파른 임금 상승과 전투적 노사분규”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며 악랄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였고, 이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퍼센트를 고점으로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59퍼센트까지 내려갔다. 하위 20퍼센트의 평균소득에 견줘 상위 20퍼센트의 평균소득은 1990년 3.72배에서 2011년 4.82배로 확대됐다.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도 노동자 탓이 아니다. 4대강, 신도시, 뉴타운 부동산 개발 등 부자 퍼주기를 하며 불어난 부채를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팍팍해지는 삶을 참으며 버텨 왔지만, 경제는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민영화 반대,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선영

도 못한 채 위기를 키우고 있다. 사실 이런 딜레마는 1980년대~2000년대에 개발도상국들이 수 차례 겪은 외채위기 때의 상황과 똑같다. 이 때문에 1994년 멕시코 외채위기와 같은 일이 조만간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세계 각국 지배자들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브라질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들은 지배자들의 고통전가 시도에 맞서는 투쟁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투쟁을 확대해서 고장 난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건설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강동훈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최근 장마가 시작돼 우천 시 공개판매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일정은 lef21.com에 공지합니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7월 15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대점(오아시스빌딩)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경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7월 16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7월 17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7월 18일)

부산 서면 주디스태화백화점 앞 18:30~19:30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16일)

고려대(안양) 정경대 후문 화요일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화요일 11:50~12:50

※ 이번 호(107호)부터 여름방학 기간 이어서 고려대와 부산대 외 대학 공개판매는 쉽니다.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오늘날 중국 노동자 투쟁은 명백히 상승 가도를 타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 준다. 한때 자본가들의 성장 모델이었던 중국이 이제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모델로 바뀌고 있다.

성지현

그림자 금융

은행과 달리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자본이 고수의 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것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림자라는 말을 쓴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건설-플랜트 노조 공동파업 결의대회

6월 27일(목) | 서울시청광장

주최 :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

7월 13일(토) 오후 2시 | 서울역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 집단을 도려내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이제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인권’ 운운하던 박근혜의 표독스런 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경찰의 범죄 은폐가 없었어도 선거 결과가 이랬을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을 통탄했다.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는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아이돌 가수조차 “행동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다”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뒤늦게 ‘장의투쟁’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소심하고 동요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더구나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의혹과 대중의 분노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와 국정원·경찰 개혁, 박근혜 사과 정도로 가뭇질 수 없다.

정부, 검찰, 국가기관 등에 온통 범죄공범들이 가득한 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문제가 바로 잡힐 리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뭔가 제대로 해결한 바가 없기도 하다. 민주당은 박근혜·새누리당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거듭해서 도움만 쥐었다. 그렇다고 범죄 몸통인 박근혜가 임명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사태는 반대자들을 탄압·사찰하고 ‘종북’ 마녀사냥을 일삼는 국정원의 본질을 드러냈다. 또,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껌데기뿐이라는 점도 보여줬다. 이 사회는 우리가 선출할 수 없는 재벌, 조중동 등 진정한 권력자들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누군가를 선출할 수 있는 과정조차 기만과 협잡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이런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은 불구속되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구속되는 게 이 사회

의 ‘법과 질서’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 NILL 발언’을 공개하며 역겨운 몰타기와 우파 결집 시도에 나서고 있다. NILL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무슨 반역죄인 양 설치는 토 나오는 행태는 우리를 더 열받게 한다. 심지어 검찰이 축구선수 정대세를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다는 소식은 기가 막힌다.

‘이명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 이 범죄의 관련자들은 모조리 사퇴하거나 구속·처벌받아야 하고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임기 초부터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는 선거 때 약속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공공부문 민영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온갖 반동적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반동적 정책과 노동자 공격에 맞선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무도한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투쟁을 거리와 캠퍼스, 작업장 등 곳곳에서 확대할 때다.



추악한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박근혜 박근혜를 겨냥한 투쟁을 확대해 박근혜의 몰타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6월 21일 국정원 규탄·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 문화제.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흥기로 쓰여 온 국정원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1997년 12월에도 안기부는 북한 정보기관과 합작해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낙선을 위한 음모를 꾸몄다. 안기부는 ‘총풍’을 재연해 달라고 북한쪽 보안기관원들에게 요청했다.

당시 안기부는 월북한 천도교 전 교령인 오익제가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를 이

용해 김대중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공작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우익·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각종 조작과 고문과 협박, 의문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74년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1992년 남한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의 조작된 ‘간첩 사건’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데 이용됐다.

정보기관은 노동운동 사찰과 탄압을 진두지휘했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많은 활동가들을 고문했다.

이런 추악한 역사를 보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광범한 분노 때문에 지배자들 중 일부는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걸레를 빨거나 한 부분만 잘라낸다고 해서 수건으로 쓸 수 없듯이 국정원의 더러운 역사는 이름을 뭇로 바꾸든 그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을 잘 보여 준다.

게다가 국정원의 국외 활동은 ‘내부의 적’을 찾아내 감시, 추적하는 국내의 모든 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내의 ‘친북좌파’에 대한 탄압과 연결돼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소수 지배자들이 착취·억압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면 비밀 경찰 등 억압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종북 마녀사냥’과 조작, 저항운동 감시·탄압을 본업으로 하는 국정원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현주



‘총풍’

1996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갑자기 남쪽을 향해 사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은밀한 요청에 북한 정권이 응대해 일어난 일이었음이 1997년 말에 밝혀졌다.

박근혜가 또 위기를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악재가 박근혜 정부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갈 듯하다. 사실 임기 초부터 위기였던 박근혜 정부는 용케 위기를 비껴 왔다. 위기가 깊어질 듯하면서도 깊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 왔다.

취임 초부터 ‘불도저’처럼 개악을 밀어붙이던 이명박과는 달리 박근혜가 좀더 조심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대선 때 이루어진 우파 총결집이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기성정치에서 반박근혜 대안이 안 보인다는 점도 있다. 민주당의 지리멸렬과 안철수의 모호함,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기도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은 일부 회복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세력은 시간을 끌고 김을 빼면서 아래로부터 저항에 대처해 왔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대화 기간을 갖자며 시간을 끌었던 홍준표가 대표적이다. 홍준표의 날치기 이후에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내세워 또 시간을 끌면서 김을 빼려 한다. 물론 ‘종북’과 ‘강성노조’를 문제 삼으며 노동운동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도 한다.

우리 편이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아래로부터 대중행동 건설을 우선하며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높여 나

갔다면 이런 것은 쉽게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대중행동 건설보다는 제도권과 의회절차적 대응을 더 중시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구실이나 국정조사에 기대를 거는 일도 계속됐다. 기층의 자신감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시간 끌기와 김 빼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최근,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농성장 철거 등을 밀어붙이며 공세를 강화하려 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우선, 경제 위기가 박근혜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가 8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말바꾸기와 복지 먹튀는 가속화하고 지지 기반의 균열도 벌어질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이미 껌데기만 남았다.

무엇보다 부패한 우파라는 박근혜의 기반이 문제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 낳고 있는 파장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박근혜의 위기를 파고 들며

공세에 나서야 한다.

법률·범죄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상대로 제도적 절차와 의회의 틀 내에서 대응하려고 우리 손을 묶어두서는 안 된다. 상반기에 태백 파업 등 대중행동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불거지고 있다. 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건설노조 등이 투쟁할 채비를 하고 있다. 임단투도 곧 본격화할 것이다.

이 투쟁들은 시기와 힘을 집중해서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저들의 시간 끌기와 김 빼기에 말려들지 말고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종북’과 ‘강성노조’가 문제라는 공격에도 수세적일 이유가 없다. 진보정의당 지도부처럼 ‘대기업 조직 노동자만 대변하지 않겠다’며 ‘반성’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 조직 노동자의 힘으로 박근혜에 맞서며 전체 민중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범죄의 몸통인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하며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김지윤·전지윤

꼴라주 99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진격의 개입



이제 우리가 진정한 진격의 개입을 보여줍시다! 일루전

일루전님의 사정으로 '꼴라주'는 이번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꼴라주'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얼굴로 찾아 뵙겠습니다.

앞시줄2013에서

▶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저항의 미래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 더 많은 정보는 16면에

앞시줄2013
MARXISM

학교비정규직 투쟁

호봉제·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해 파업으로 나가자

6월 22일은 역사상 가장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투쟁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차별과 냉대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교육을 지탱해 온 소중한 버팀목이다. 교실에서 급식실까지 학교 구석구석에 학교비정규직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단 하루도 학교가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며 낮은 임금에 허덕여 왔다. 또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까닭에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마음 졸여야 했다.

이것은 마땅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차별해 왔기 때문이다. 차별이 만연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평등과 정의를 배울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처우개선, 교육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6월 14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물론 그간 법조차 지키지 않던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도 투쟁이 일군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강사직종이나 한시계약직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빠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며 단시간 시간제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기계약직도 해고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

호봉제, 상여금, 명절휴가비 같은 처우개선안 마련은 연기됐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호봉제는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말이다.

파업 건설

교육부는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최대한 늦춰보자는 속셈인 듯하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친재벌·반노동의 박근혜 정부가 알아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6월 22일 집회를 디딤돌 삼아 파업 건설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도 파업까지 이어진 단호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노조의 규모도 배로 커졌다. 우리가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때 6월 말부터 국회에서 시작될 교육공무직 법안 논의에도 압력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거듭 빠져들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만큼 상황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때 무엇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속한 **3개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의 단결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하나로 뭉칠 때 힘이 커진다는 당연한 진실 때문이다. 교육부까지 교섭장으로 끌어내고 새누리당까지 교육감 직접고용을 얘기하게 된 것도 바로 연대회의로 단결해 투쟁한 성과였다.

물론 서로 다른 노조들이 함께 투쟁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여러 개의 노조로 나뉜 상황인 가하는 압력도 클 것이다. 그럴수록 각 노조가 서로의 견해나 정치적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비판하면서도 공동의 요구와 행동을 중심으로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투쟁 전술과 방향을 우호적으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지난해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가 함께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토론하면서 실천 속에서 검증해 나갈 때 서로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줄일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고, 전체 노동계급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최근 서울 상현초등학교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학교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함께 싸우고, 세 노조가 공동으로 분회 창립식을 한 것은 좋은 사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의 연대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또 어디 있었는가? 정부에게 학교비정규직, 교사, 공무원의 단결만큼 위협적인 것이 또 어디 있었는가?**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건설하면서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인다면 전교조의 일제고사·성과급에 맞선 투쟁도, 공무원노조의 노조탄압도,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인력충원을 위해 파업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구룡중학교 이주니 분회장
“파업을 하니 우리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서울 구룡중학교는 조리원 6명이 학생·교직원 1천여 명의 급식을 담당합니다. 그중 한 명은 운반과 배식을 전담하기 때문에 실제 조리하는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노동강도가 너무 강해서 5명이 허리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병가조차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조리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4시간짜리 시간제 배선원(식기·식판 운반과 배식 등을 맡는 노동자)을 보충해 주겠다고 할 뿐 조리원은 늘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조리원을 채용하면 나중에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파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파업을 벌인 3일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급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진미이장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교장입니다.

교장은 교장실로 찾아간 우리를 잠상인 취급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밥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문밖에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문밖

우리는 그동안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추가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

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 시간을 갖기 위해 지금은 잠시 파업을 접었지만 교장이 계속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겁니다. 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에서 노비 취급받던 우리가 파업도 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우리를 대하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항의하러 왔다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뒤 우리를 지지하게 된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부당함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충분히 싸움 만한 가치가 있고,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노동자 연대의 모범 — 상현초등학교 정용윤 선생님

“전교조와 학비노조가 함께 투쟁하는 날을 꿈꿨습니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개방적 회의 기구인 ‘교사 다모임’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계약을 따져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분석하고,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의 근로계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도 학교비정규직 10명 중 9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학교장이 조리종사원을 포함해 회계 비정규직(전산, 도서, 행정, 교무지원, 돌봄강사 등) 10명 정도를 사실상 해고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분회에서 “이것은 혁신학교 설립의 철학을 훼손하는 일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고를 막으려 나섰습니다.

교장을 설득하려 애썼고, 교육위원을 만났습니다. 언론사에 기고와 보도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학교장은 해고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이 사태에 대해 밝히고, 학운위 위원장을 비롯해 학부모들에게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학운위장이 차기 교장에게 재계약을 제안하기로 해서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함께 공동분회 설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인간적 차별 없이” 시작했기에 공동분회 창립식을 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개교 이후 전회련이든, 공무원노조든, 전교조든 어떤 노동조합이든지 분회를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진미이장

자연스레 함께 열게 됐습니다. 바쁜 와중에 연습을 많이 못 했지만 공연도 했고, 즐거웠습니다.

한 울타리

사실상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창립할 때도 해고된 행정실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있었죠. 언젠가 한 학교 울타리에서 사는 교직원 이 함께 투쟁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교육적 관점에서든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의 장이기에 학생들에게 있어 누구든 ‘선생님’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 대우와 더 나은 대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교육적 열의가 높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개교 직후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호칭을 듣고, 함께 결정해 “선생님”을 넣어 부르고, “교무보조”가 아닌 “교무지원사”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식도 제한합니다.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곧 있을 학교비정규직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지난해처럼 우리 학교 전교조 분회의 성명서로 지지를 밝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알릴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담임통신이나 주말 편지 등을 이용해서도 최대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의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인터뷰·정리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 발표는 남아 있고, 정부의 기만적 ‘의견 수렴’ 절차였던 6월 14일 공청회도 노동자·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의 연좌 시위로 통쾌하게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9일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적자 노선 민영화, 화물·차량 자회사 설립, 철도 운영 지주회사 설립 등 일련의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입기 내에 이 모든 일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역겹게도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를 살릴 대안은 경쟁 도입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적자를 만든 것은 정부다. 정부는 PSO(공익서비스 부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인천공항철도 부채를 떠넘긴 당사자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코레일의 적자는 싼 값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착한 적자”다.

국토부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인력이 줄고 적자가 늘었다’고도 비난했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주요 공기업 27개 중 26위고, 복지 수준은 꼴찌다. 이미 일부 언론조차 “공공기관의 철밥통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했던 까닭이다.

게다가 고용이 줄어든 것은 적자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력 수천 명을 감축한 결과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와 외주화 확대로 이어져,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과 임금·노동조건 향상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정당한 저항

정부는 민영화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고 또다시 “철밥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노동자들의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노동자들은 가까이 KT에서부터 멀리 영국·일본 등에서까지 민영화가 불러온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의 고통을 똑똑히 지켜봐 왔다.

최근 1백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헨티나 열차 충돌 사고도 우리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할 민영화의 폐해를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영국의 철도 요금 폭등이 보여 주듯, 민영화는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금고를 채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올해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헤치려 한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비단 특정 재벌·투기자



성장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6월 14일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이 정부의 기만적인 철도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만은 아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유럽 전역에서 확대된 긴축과 공공부문 민영화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심지어 최근 프랑스에서도 철도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곳은 정부·노조·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철도 총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내 진보진영 내 일부가 대안 모델로 여겨 왔는데 말이다.

박근혜 정부도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을 쥐어짜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 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관찰하지 못한 철도 민영화를 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첫째, 철도 민영화가 단지 일부 적자 노선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재확립해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공격의 신탁탄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 파업과 광범한 연대로 맞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결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철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철저히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민

영화 외에는 이점을 허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정부는 조만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께 철도 분할 민영화를 확정 발표한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질주를 막아 낸 철도노조가 다시금 파업 준비에 나선 것은 매우 반갑고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5월 무렵부터 대규모 집회로 결집하고,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공청회도 무산시키며 자신감을 높여 가고 있다. 지역 대책위들도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와 총회 등을 벌이며 연대를 넓히고 있다.

다만 철도노조 지도부, 경실련 등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투쟁 건설에 압도적으로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지금의 협상 제안은 투쟁의 힘을 분산하고 관한 환상만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본격적인 투쟁 과정에서 저쪽이 밀려 협상에 나선다면 응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노사민정 논의기구’가 우리 쪽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봐야 한다.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사측이나 민주당 등도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노력”, 효율성 확대, 통합 지주회사나 제2공사화 등을 말하며 시장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들

은 얼마든지 흔들리고 뒤통을칠 질 수 있다.

경실련이 민영화 반대에 나선 것은 10여 년 전에 견주어 나아졌지만, 이 단체가 “경영 합리화”를 내세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이 약점을 노려서 ‘경실련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아니냐’고 파고 들었다.

혹여 정부·여당 내 일부가 사회적 논의를 수용하는 척한다 해도, 이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도 ‘4·20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사화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회를 위한] 입법 과정이었다.”

따라서 지금은 투쟁 건설에 우선적으로 중심을 두며 우리 편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단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6월 25~27일 열릴 정의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하자. 전국적 여객·화물 운송망을 움직이는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춰 지배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이 힘을 최대한 끌어내 전면 파업으로 나아가 갈 때, 정부를 물러서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엄청난 탄압을 퍼붓겠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또다시 위기로 빠져드는 박근혜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게다가 지금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 많다. 지난해부터 구축해 온 대책위들은 광범한 연대를 건설할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 등으로 얼룩진 재앙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미친 질주를 막을 것인가. 우리가 단호하게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맞선다면, 박근혜의 민영화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박설

새로 나온 소책자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134쪽, 4,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altogether@altogether.or.kr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박근혜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에 나서자, 지역과 거리에서 반대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수원·목포·광주·제천단양·대전·부산·경남·전북 등 전국에서 지역대책위들이 본격 가동되고,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지역대책위도 건설됐다.

이런 대책위들은 거리에서 서명 운동, 홍보전, 토론회,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홍보전에는 철도 노동자, 학생, 사회단체·노동조합 활동가 수십 명이 참가하고 있고, 참가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최근 홍대 앞 홍보전에 40여 명이 참가해 활력 있게 서명을 받고 민영화 반대 주장을 펼쳤다. 거리의 청년들은 “내가 이래서 박근혜 안 찍었다”, “우리가 촛불집회 때 민영화 반대를 그렇게 외친 걸 잊었나” 하며 응원했다. 철도 노동자들도 “이렇게 지지가 크다니, 정말 흡족하다”며 상당히 고무됐다.

서울 동부지역에선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계기로 지역의 연대가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지역단체들은 공동 활동을 통해 결속력을 높이고 있고, 철도 노동자들은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 학생들의 연대에 자극을 받았다. “우리보다 처지가 열

악한 분들이 이렇게 오다니, 정말 고맙고 연대의 소중함을 느꼈다”,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거리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운동은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연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철도 노동자들이 자신감 있게 파업을 결의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실제로 6월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 15곳에서 열리는 ‘지역대책위와 함께하는 철도 노동자 야간 총회’는 정의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

6월 12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야간 총회는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집회에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연대단체 활동가 4백여 명이 모여 투쟁을 결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활력 있는 집회로 참가자들이 고무됐고, 노동자들은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하자”, “열차를 멈춰 서라도 국민의 철도를 사수하자”며 힘을 모았다.

이런 거리와 지역의 민영화 반대 운동은 더 확대돼야 한다. 민영화는 해당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의 위기는 우리에게서 싸우기 좋은 기회다. 성장하고 있는 민영화 반대 운동의 건설·확대에 박차를 가하자.

이정원

앞시점2013에서

▶ 민영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 더 많은 정보는 16면에,

앞시점2013 MARXISM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중간 평가

이제 국립화를 위한 투쟁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지 네 달이 지났다.

이 악랄한 자는 이따금 주춤거린 듯 하지만 처음부터 공공의료 공격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도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고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여론도 여전히 광범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조차 경남도의회에 해산 조례를 '재의'하라고 명령하는 시늉을 한 것이다.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그동안 투쟁의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 왔다. 홍준표의 폐업 선언과 해산 조례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며 쓰디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투쟁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처음 발표할 때 상황은 홍준표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주요 장관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임기 초부터 위기였다. 홍준표의 발표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과도 어긋났다. 홍준표의 돌발적 발표에 새누리당이 잠시 동요한 이유다.

'적자 내는 공공병원은 문 닫자'는 별거 벗은 시장 논리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즉각 저항을 시작했고, 홍준표는 큰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한 달 가까이 별 진전이 없자 홍준표는 이제 '강성노조'를 폐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반대 진영을 분열시키고 우파를 결집시키려 한 것이다.

갈팡질팡하던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물밑에서 홍준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성장하고 있었다.

도의회를 봉쇄하며 여러 차례 조례안 통과를 막아 냈다. 4월 13일 창원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해 강력한 행진도 했다. 노동자 수백 명이 도의회 봉쇄 투쟁에 연대했다.

물론 아직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층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을 더 끌어올릴 전술이 필요했다. 대중행동을 확대해 가면서 의료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했다. 그럴 때 노동자들이 투쟁할 이유와 연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을 이끌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개



“이제 박근혜가 책임져라”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바라는 모두의 투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혁주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대중행동보다는 갈수록 법적·제도적 수단에 매달렸다.

그러다보니 의회 내 민주당의 구실을 강조하게 됐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필요성도 수용하게 됐다.

이런 후퇴는 첫째,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와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 둘째,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강화해서 연대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됐다. 셋째, 홍준표의 기를 꺾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홍준표는 65명의 조기퇴직 수용에 “전원 사표를 써라” 하는 잔인한

냉소로 답했다.

후퇴와 전진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이 더 악화되자, 한 달 동안 대화를 갖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홍준표는 이튿날 몰래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추가로 퇴직 신청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 편은 이 한 달간 더 강력한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등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민주당 발의 법안에 더 기대를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 부족한 법안조차 거부해 버렸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또다시 한발 물러서며 인력과 병상 감축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우리 편 대의에 균열을 내는 잘못된 대응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노동자 연대다함께말고는 이 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교섭 전술”이라며 이것을 포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양보를 보고도 홍준표는 5월 29일 끝내 폐업을 발표했고,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해 버렸다.

그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 뻔하다. 책임을 몰타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대중의 관심과 분노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이다. 심지어 ‘적자’

‘강성노조’를 문제 삼으려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청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준표는 이를 간단히 거부해 버렸다.

따라서 이런 시간 끌기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 국정조사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투쟁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은 우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공공医료를 강화하려면 제도권 야당과 의회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 위기와 우파 집권의 시대에는 개혁을 위해서도 급진적인 대안을 내걸고 대중 투쟁의 방식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 병원을 점거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최종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고,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화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요구다.

이런 대안을 위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선언을 맡아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더는 민주노조로서의 의무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투쟁을 건설할 때 진주의료원 폐업을 신호탄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공격하려는 박근혜의 시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안팎과 기층에서 이런 주장과 전술을 제시하며 투쟁의 중추 구실을 할 투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중요한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장호중·전지윤



99퍼센트의 눈

폐업은 살인이다

“환자들이 잘못된 게 없다. 우리 보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는 정 씨 할아버지의 정당한 외침.

아무 잘못 없이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 스물 네 명이 세상을 떠났다. 수천 만 원의 병원비 폭탄을 맞고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받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들은 병원을 떠날 수 없다. 지금 남은 환자는 두 명 뿐이지만, 이들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는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

사진·글 이미진

우리은행 민영화 – 슈퍼갑 은행 만들며 노동자 밀어내기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로 은행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다른 국내 은행에 팔아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만들고, 이를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뱅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다. 전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은행권의 삼성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이들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으니, 이들에게 지급 보증을 해 줄 초

대형 은행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초대형 은행은 자금 조달 경로도 국제화해서 더 싸게 자금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시중은행을 두 개 이상 합병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국가 소유인 우리은행을 국민은행에 파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새 금융위원장 신재윤은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우리은행 행장이 겸임토록 했다. KB금융지주회사 회장에는 모피아(재무부 전현직 관료

들의 특권형 인맥을 가리키는 말) 실세 출신 임영록을 앉혔다. 인수될 우리은행은 회장이 없는 셈이 됐으니, 명백히 두 은행의 합병을 염두에 둔 인사인 것이다.

지금껏 은행 대형화 정책은 정부가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을 더 장려하는 정책이었다. 은행들은 투기적 투자를 더 늘릴 것이고, 평범한 이용자에게 ‘갑질’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소수 대형 은행들은 격렬한 수익 경쟁 속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몰려가 부동산 폭등에 기여했다. 그 반대급부로 담보 없는 저소득층은 은행 서비스에

서 사실상 ‘퇴출’돼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렸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곤 했다.

게다가 두 은행이 합병하면, 영업점이 많이 겹쳐서 인력 감축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금융노조와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의 KB국민은행지부와 우리은행지부는 공동 혐의제를 꾸렸고, KB금융지주회사 각 단사 노조들은 임영록의 출근을 저지하며 명동본점에서 일주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도 열렸다.

그러자, 임영록은 노조를 찾아와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지한 약속이 될 리 없다. 메가뱅크 계획은 임영록 개인이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노조가 출근저지투쟁을 중단한 건 아쉽다. 소수 상근간부들의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에서 은행 민영화(와 그 폐해)에 반대하는 큰 규모의 시위와 투쟁으로 발전해야 승산이 있다.

김문성

노동자 저항으로 붕괴 직전으로 몰린 그리스 정부

최근 그리스 정부가 공영 방송사 ERT를 폐쇄하고 노동자 2천6백 명을 해고하려 했다.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2015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노동자 15만 명을 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의 일주일 동안 점거 농성과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연대 총파업도 일어났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에 행정법원이 방송 업무를 재개하라고 판결하며 정부의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ERT 노동자들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2차 연대 총파업도 논의되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ERT 투쟁과 그리스 정치 상황을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자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붕괴 직전 상황이다.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그리스 공영 방송사 ERT를 폐쇄하려 했다. 이 시도는 대중적 저항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집권당인 신민주당과 연정의 하위 파트너들(사회당과 민주좌파당)의 사이가 크게 벌어져,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선이 임박했다고 본다.

시작은 6월 11일이었다. 방송국을 폐쇄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노동자들이 따르지 않기로 했다. ERT 노동자들은 아테네 북부에 있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민영 방송사 노조들은 즉시 6시간 동안 조업을 중단했다. 이 덕에 ERT만이 유일하게 뉴스를 내보낼 수 있었다. ERT 본사 앞에는 1만 명이 모였고, 방송국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연대 시위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ERT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ERT 지사 앞으로 몰려들어 방송국을 침탈하려는 경찰을 물리쳤다. 어느 곳에서든 TV를 틀면 점거 투쟁을 지지하는 깃발과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나왔다. “단결한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쓰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제작한 붉은색 현수막도 계속해서 방송에 나왔다.

정부가 밤늦게 송출을 다시 장악해 방송을 끊기 전까지는 ERT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 소식이 TV를 통해 전파됐다. 정부가 방송을 끊은 후에도 통신 기업의 노조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ERT 노동자들의 자체 제작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계



긴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에 맞서 단결한 그리스 노동자들.

속 방영됐다. 정부는 완전히 고립된 처지였다. 다른 언론사의 노조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여 ERT 노동자들의 자체 제작 방송 말고는 모든 신문과 뉴스가 중단됐다. 각각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조를 대표하는 그리스노총(GSEE)과 공무원

노총(ADEDY)은 6월 13일 ERT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이 총파업은 대성공이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ERT 점거 농성장으로 행진했다. 그동안 벌어진 20여 차례의 총파업 중 최초로 파업 참가자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공산당,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안타르시아 소속 조직들의 깃발이 ERT 정문 앞에서 함께 휘날렸다. 사마라스는 사태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다. 트로이카(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의 압박이 사마라스의 계산 착오에 한몫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붙은 공공부문 노동자 감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ERT에서 단박에 2천6백 명을 해고했다면 트로이카는 만족했을 터였다.

계산착오 최근 사마라스가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일어날 뻔한 중요한 파업을 비껴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계산 착오에 작용했다. 사마라스는 노조 지도부를 옥박질러 교사 파업을 취소시킬 수 있었다. 사마라스는 노조 지도부가 또 그러리라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노총과 공무원노총은 이미 연대 총파업을 벌였고, 사마라스가 물러서지 않으면 2차 총파업을 벌이려 한다. 이제 사마라스는 움짱달짝 못하는 처지다. 사회당과 민주좌파당 지도부는 ERT 폐쇄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마라스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총선을 다시 치르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사마라스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리스의 정치 위기는 더 심화할 것이다. 연정 내 균열은 크게 벌어졌고 노동자들의 반격은 힘을 얻고 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58호 / 번역 차승일

맑시즘2013에서 ● 유로존 위기와 저항 그리고 좌파의 대안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큰 가능성을 보여 준 터키 광장 점거 운동

터키 수도 이스탄불의 한 공원을 지키려는 데서 시작한 시위가 정부에 맞서는 운동으로 번졌다. 권력의 혹독한 탄압으로 시위대가 광장에서 밀려나면서 아슬게도 운동이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현재는 침묵 시위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자 켄 올렌데가 경찰의 침탈이 시작되기 전 탁심 광장을 찾아 시위대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켄 올렌데가 운동 내에서 오고간 많은 의견들을 소개하며 운동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지를 전한다.

탁심 광장과 바로 옆의 게지 공원 근처 거리에는 분노가 여전히 들끓고 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 가스를 동원해 반정부 투쟁에 나선 시위대를 해산했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시위가 계속 됐다. 이번 저항 운동으로 터키 정부가 안정적이고 강력하다는 환상이 산산조각났다. 어떤 때는 경찰과 격렬히 싸우고 어떤 때는 흥겨운 축제를 벌인 이번 운동에는 변화를 바라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 탁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혁명가, 평화주의자, 노동조합원, 환경운동가,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등 다양했다. 게지 공원에 쇼핑물을 지으려는 계획에 반대한 소규모 시위를 경찰이 공격하면서 대

중적 항의 운동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총리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정부에 이러저러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운동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그 의견들은 운동의 모순을 담고 있기도 했다.

이슬람화 정의개발당은 터키가 경제 호황을 겪고 지역 열강으로 성장한 것을 등에 업고 세 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의개발당 정부는 “자유주의”를 자처하며 공무원에게 두건 같은 무슬림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완화했다. 쿠르드 소수민족과도 대화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터키 사회에서

“이슬람화”가 늘어나는 현상에 분노했다. 특히, 사람들은 주류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새 법률을 지적했다. 정의개발당 정부는 자신이 이슬람의 도덕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려고 주류 판매를 금지하려 했다. 이번 운동에는 정의개발당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노한 가난한 사람들도 대거 참가했다. 민족주의 정당들은 국수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터키 깃발을 몸에 둘렀다. 과거에 이런 행동은 분열을 부추기고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불만을 돌리는 데 쓰였다. 많은 새로운 시위 참가자들은 터키 깃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과거에 터키 정치

를 짓눌러 온 분열을 다시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옹계 지적했다. 탁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만나 보니, 투르크인이든, 쿠르드족이든, 무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운동에 참가했다. 거리 시위의 힘은 한때 강력했던 터키의 노동조합운동이 되살아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리의 활기가 작업장과 공장으로 전달되며 이집트 혁명이 전진했듯이 말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운동에 참여하면, 즉 파업을 벌이는 등 작업장 내 투쟁을 벌이면 이 운동은 경찰과 군대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58호 / 번역 정다운

김정우 지부장을 석방하고 쌍용차를 공기업화하라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24명의 낮이 서린 분향소를 잔혹하게 짓밟은 것이다. 5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심지어 검찰은 철거에 저항하던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아예 ‘대한문 화단경비대’가 됐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조차도 사

지를 들어 멀리 내던진다. 오죽하면 ‘유신 시절’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최근 쌍용차 법정관리와 정리하고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일개 회계법인의 실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법원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사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비극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상하이차가 회계조작과 고의 부도로 ‘먹튀’를 하는 동안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애초 ‘먹튀’ 의혹을 무시하며 상하이차에 매각을 추진한 것도 정부였다. **먹튀** 따라서 정부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더군다나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보장을 위해 공기업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정당한 요구다. 정부야말로 그럴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압력의 산물이다. 실상이야 저질 일자리를 확

대하는 사기일지라도 말이다. 공기업화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대중행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늘어 가는 때에,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혁명의 역사에서 배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생애

고전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러시아에서 성공을 거둔 레닌과 볼셰비키의 혁명 전략을 서구 사회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람시는 혁명을 부정하는 자들에 의해 고향됐다. 최근에 그람시를 제대로 재발견하려는 흐름이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레프트21)도 이에 기여하 고자, **최일봉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이 지난해 맑시즘2012에서 그람시의 생애와 정치적 유산을 다룬 글을 심는다. 최일봉은 다가오는 맑시즘2013에서도 '안토니오 그람시와 (옥중수고)'를 주제로 연설한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 이탈리아 남부의 빈곤한 농어촌 지역인 사르데냐 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주도 소작인도 아닌 하급 공무원이었으니 당시 사르데냐 사회에서는 중간계급에 속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역 유자들에게 잘못 보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상당 기간 한 적이 있어, 이후로도 그람시의 집안 형편은 넉넉치 못했다. 대학 시절에는 끼니를 거르기가까지 해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람시는 다섯 살 때부터 척추장애아가 돼, 이후 '꿈꾸'라고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다. 게다가 척추장애로 말미암은 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는 평생 병치레로 골골해야 했다. 또, 척추장애로 그람시는 매우 단신에 가분수인 외모로도 마음고생을 했다.

그람시는 무솔리니의 감옥에 수감돼 있는 동안 척추 카리레스, 결핵, 동맥경화증 등으로 극심하게 쇠약해졌다. 하지만 파시스트 정권은 그를 치료하길 사실상 거부했다. 마침내 그람시는 1937년 옥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 순교자로 존경받고 있다.

그람시는 스무살 때인 1911년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 도시 토리노의 토리노대학교에 장학을 받고 들어갔다. 그는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철학·역사학·문학 등 인문학 분야도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으로 1913년 이탈리아 사회당(PSI)에 가입했다.

그러나 1915년 그람시는 건강이 나빠져 학기를 남기고 휴업을 포기한다. 대신에 그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치 활동에 뛰어들어 1915년 사회당 신문의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즈음 이탈리아는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가차없이 군수품 생산을 촉진했다. 금속 산업, 특히 자동차 공업과 주조 공업이 급성장했다. 노동계급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전쟁 인플레이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대폭 줄어들었고, 공장은 군대의 규율에 종속돼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됐다.

농민과 농업 노동자는 징집돼 무려 5백만 명이 전장으로 보내졌다. 그 가운데 60만 명이 나 사망했고, 훨씬 더 많은 수가 지체장애인이 됐다.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18년 말~1919년 초

초파주의 개혁주의 단체들과 일체의 협력과 타협을 거부하는 조류. '혁명적 순수성'을 내세우며 주요 정치 투쟁에 기관해 사실상 운동을 개혁주의에 넘겨주는 경우가 흔하다.
중간주의 개혁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를 오라기라하는 정치 조류. 혁명적 연상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혁주의적 전략을 추구하거나 일관된 전략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코민테른 러시아혁명 성공 후 혁명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레닌이 만든 국제공산당.
유로코뮤니즘 1970년대에 공공연히 소련을 비판하고 혁명을 포기하면서 개혁주의로 전향한 공산당의 조류를 뜻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사유질 공산당들이 먼저 변신해 '유로코뮤니즘'이라 불린다.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폭발 일보직전의 활화산이 됐다. 실업이 급증했고, 식료품과 물자가 크게 부족했다. 사병들인 농민들은 불만과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로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토지 재분배를 요구하는 격렬한 행동이 급증했다.

노동자들도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했다. 특히 토리노 노동자들은 투쟁 전통이 아주 강력했다. 이들은 1911년 이래의 전통에 따라 공장에서 '내부위원회'라는 현장조합원 조직을 건설했다.(오늘날 한국에서 '현장조직'이라고 열도당토않게 불리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조직의 특징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아울러 정의를 준비시킨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시 이탈리아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전쟁 덕분에 여성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자층이 대거 공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토리노 내부위원회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탈리아 금속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실업보험, 내부위원회 인정 등을 얻어 냈다.

한편, 이탈리아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섰는데도 전리품으로 얻은 영토가 지배자들과 민족주의자들에겐 너무 불만족스러워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민족주의 시인 단눈찌오가 주도한 준군사조직이 군부의 사주와 후원으로 발간반도의 도시 리예카를 강점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로써 우익이 의회 바깥의 행동으로 일정한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생각과 전례가 마련돼 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이제 우익이란 좌파는 중앙 정부를 무시는 게 일상사가 됐다. 이탈리아는 1917년 당시의 러시아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1919~20년의 '붉은 2년(Biennio rosso)'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비엔노 로소 (Biennio Rosso)

1919년 토리노 노동자들은 내부위원회를 기반으로 공장평의회를 설립했다. 공장평의회는 공장 운영을 담당했다. 자연히 기업주의 경영권과 총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람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장평의회가 혁명적 지방정부 구실을 하는 러시아 소비에트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람시는 1919년 5월 혁명적 주간신문 <새 질서 L'Ordine Nuovo>를 창간해 매주 공장평의회를 핵심 이슈로 다뤘다. 그래서 <새 질서>는 공장평의회 신문으로까지 알려졌다. <새 질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벌였다—모든 노동자가 공장평의회 투표권 갖기, 각 작업장마다 자신의 작업장 대표 선출하기,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통제를 증대시키기 등.

그러나 그람시가 하나 놓친 게 있다. 그람시는 사회의 혁명적 변혁이 있어야만 노동자 관리가 온전히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없으면 공장평의회는 수많은 개개의 정의에 휩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침내 좀 더 투쟁적인 추상적 노조 대표자 기구가 되는 것에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이것은 노동조합 관료 기구의 개혁주의에 의해 포섭되고 순치되는 길이었다.

그람시는 공장평의회와 종재에 매료된 나머지 혁명적 정당(그람시는 이를 '근대 군주'라고 불렀다)의 구실도 과소평가했다. 이는 어느



“붉은 2년” 1919~1920년 이탈리아에서는 러시아 혁명 시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장을 점거한 토리노 노동자들이 총을 들고 점거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이들은 '적의대라' 불렀다.

정도 사회당의 나머지 분파들이—초파*인 보르디가 파를 포함해—보이고 있던 엘리트적 당 개념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짚었다. 그들은 모두 대중의 자주적 활동을 경시하고 당이 대중에게 해방을 가져다줄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람시의 반발은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옹호해 당내 투쟁을 벌이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특을 본 건 아마메오 보르디가의 초좌파와 세라타의 중간주의*따였다. 또한 그 덕분에 그람시 파와 <새 질서>의 영향력도 토리노와 그 배후지에 국한되게 됐고, 노동조합 관료들도 협공에 가세하기가 쉬워졌다.

한편, 기업주들은 공장평의회를 깨뜨리고자 안달이 나 있던 터에 그람시의 <새 질서> 파가 토리노에 고립돼 있는 틈을 봤다. 1920년 9월 사용자들은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공업 도시로 <새 질서>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밀라노에서 먼저 대량 해고 공격을 자행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공장 점거 투쟁이 일어나 며칠 만에 1백만 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토리노로도 번졌다. 공장 점거로 공장평의회들도 활력을 되찾았다.

공장 점거 운동의 힘은 밀라노와 토리노가 서로 불균등했다. <새 질서>의 영향력이 미미한 밀라노에서는 노조 관료들과 사회당이 공장평의회를 설립하려고 통제했다. 그들은 공장 점거 운동을 총리 세라타가 이끄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여겼다. 자기들과 기업주들 사이를 중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다만 한편, 토리노에서는 노조 관료와 사회당 정치인들이 <새 질서>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기세 때문에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람시는 사회당과 결별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그람시는 혁명자들이 사회당과 별개인 공산당을 창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랜 전 췌임 1920년 봄에야 하기 시작했었다. 그람시와 <새 질서> 파야 순식간에 새 당을 설립할 수 있었겠지만, 공장평의회와 다수와 사회당의 전권 당원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없었다.

결국 사회당과 노동조합총연맹 관료들이 제공한 기회를 놓쳤다. 그럼으로써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공장 점거 운동이 패배한 다음 해인 1921년과 1922년 파시스트들이 날뛰며 농민 조합, 농업 노동자 조합, 좌파 계열 신문사, 사회당이 집권당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등을 불태우고 활동가들을 살해하는 파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람시가 아니라 초좌파인 보르디가였다. 중간주의파의 세라타가 개혁주의파의 필리포 투라티와 타협하고 절충하느라 기회를 놓치고 방향감각마저 잃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창하고 과장스런 혁명적 연사로 자극하면 꽤 큰 반향을 얻을 분위기가였다.

특히, 보르디가의 당 개념은 내가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엘리트주의적이어서, 공장 점거 운동 기간에도 그는 그저 당의 구실만 강조했었다.

게다가 보르디가는 공장평의회를 지지하지 않고 아예 비난했었다. 이유인즉슨, 공장평의회 때문에 당의 정권 장악 노력에 사회주의자들이 주의를 집중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경제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주의를 분산된다는 것이었다.

그람시와 <새 질서>도 보르디가에게서 비난받았다. 이처럼 엘리트주의적인 보르디가의 당 개념은 그람시의 당 개념과 도무지 맞을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람시는 침묵했다. 내 보기로 그는 보르디가에게 주눅이 들어 있어 운동은 토리노로도 번졌다. 공장 점거로 공장평의회들도 활력을 되찾았다.

이것은 나쁜 결과를 빚었다. 세라타의 중간주의파도 러시아 혁명과 이탈리아 혁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보르디가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함께 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수파인 개혁주의파만 쫓아내야 했는데, 그만 보르디가는 자기가 분당해 버렸다.

그런데 그만 그람시는 이것을 목격했다. 1921년 1월 리보르노에서 열린 사회당 대의원대회에서 보르디가는 탈당을 강행했고, 그람시도 보르디가와 행동을 같이했다. 보르디가와 그람시가 분당해 창당한 공산당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소규모였고, 사실상 고립된 담으로 출발했다. 게다가 창당 이후 과정에서 보르디, 초좌파주의로 말미암아 미숙하고 치기어리다는 한계를 안고 태어났다.

무솔리니의 등장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공장 점거 운동이 제공한 기회를 놓쳤다. 그럼으로써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공장 점거 운동이 패배한 다음 해인 1921년과 1922년 파시스트들이 날뛰며 농민 조합, 농업 노동자 조합, 좌파 계열 신문사, 사회당이 집권당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등을 불태우고 활동가들을 살해하는 파

추천 소책자

《국해되지 않은 그람시》
크리스 하먼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40쪽, 2,5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

위의 테러와 런치를 가했다.

좌파 일반이 혼란에 빠졌고, 특히 사회당과 노조 관료들은 별 효력도 없이 법과 질서에 호소하기만 했다.

세라타는 그저 공허하게 사회주의를 주장할 뿐, 알맹이 있는 전술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공산당 지도자 보르디가는 파시즘이 의회 제도를 제거한다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환상도 제거해 주는 셈이니 나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반파시즘 공동 행동을 위해 있어서, 필요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이 위험한 순간에 말이다.

다행히 로마, 파르마, 리보르노, 라스페치아 등지에서 아르디티 델 포폴로, 즉 '인민의 분대들'이라는 반파시즘 행동단체가 결성돼 파시스트들과 '맞짱뜨고' 있었다.

불행히도 사회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들을 비난했다. 이들이 파시스트에 맞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를 불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회당과 노조 관료들은 심지어 무솔리니와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했다.

물론 무솔리니는 곧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덕분에 좌파 측만 무장 해제됐고 그 틈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파시스트들이 승리할 듯하자 비로소 노동계의 비혁명적 지도자들은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혼비키지 않고 그저 졸속으로 지시한 총파업은 공허한 호소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람시는 처음에는 아르디티 델 포폴로를 만났다. 하지만 당의 보르디가 지도부가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리고, 무솔리니 집권으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주

장하자 이내 침묵해 버리다가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일부 대변하기까지 했다.

보르디가가 이끄는 공산당의 초좌파주의는 1922년 2월 노동조합총연맹, 아나키즘적 신디칼리스트 노조연맹체, 선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구축한 반파시즘 노동운동연합을 종파적으로 불신하고 의심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결국 무솔리니는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마침내 1922년 10월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파시즘의 탄압은 토리노에도 미치고, 1926년쯤엔 모든 진보 단체와 개인, 심지어 모든 자유주의 단체와 개인에게도 미치게 된다.

다행히 그람시는 1922년 코민테른 제4차 대회에 이탈리아 측 대표로 참석해 모스크바에서 1년만 가량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체류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정치적 삶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공산당의 방향 전환을 위한 그람시의 노력

그람시는 1924년 초부터 당의 지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 보르디가가 지도부에서 밀려난 지 반년 남짓이 지났 뒤였다.

그는 파시즘이 여느 자본주의 정권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시즘은 자본가 계급도 노동계급도 사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중간계급 대중 운동으로, 매우 모순됐으면서도, 좌파 단체와 노동단체는 물

론 의회제 민주주의의 계급 타협 기구들, 심지어 국가와 교회에서 독립적인 단체들도 금지시키는 걸 표방하는 매우 극우적인 정치 운동이자 그에 기반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시즘에 맞서 모든 반파시즘 단체들이 단결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종파적 회피 노선을 그만두고 파시즘에 맞서 코민테른 제3차 대회와 4차 대회가 역설한 공동전선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물론 그람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착각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런 착각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공동전선) 정책은 파시스트에 맞서 단결을 염원하는 노동 대중의 정서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덕분에 그람시가 새 리더인 공산당은 1924년 4월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 마테오티가 파시스트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무솔리니에 반대하는 대중 정서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확산되던 3~4개월 사이에 몇 배로 급성장했다.

그리고 그람시는 1926년까지 당에 대한 리더십을 계속 키우면서 당을 보르디가의 종파적 유산에서 벗어나도록 재무장시켰다. 이를 잘 반영하는 문서가 바로 1926년 1월의 <리용 테제>다. 이 문서는 당 노선 재정립의 길라잡이이자 그람시 저작의 백미다.

불행히도 아들은 무솔리니에 대한 분노를 기반으로 대중 운동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반격할 수 있었고, 심지어 더 단단하게 독재 체제를 짊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박탈권을 법제화해 마침내 1926년 말 가차로운 눈엣가시인 그람시를 체포해 수감시킬 수 있었다. 1928년 6월 파시스트 정권의 검찰은 그람시 공판에서 구형을 하면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20년간 저 두뇌가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옥중수고

그람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해 죽음의 병마와, 또한 파시스트 정권의 전향 유흥과 싸웠다. 1929년부터 1935년까지 그는 무려 33권의 공작에 글을 쓸 수 있었고, 그 공작은 어찌어찌 해서 운출계 밖으로 유출돼 나중에 출판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고전을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전히 기억에 의존해 그 저작들을 인용했다. 1935년에는 병세가 너무 악화돼 집필을 더 할 수 없었다. 국제적인 석방운동 덕분에 로마의 병원 시설로 이감되기는 했지만 너무 늦어, 그는 마침내 1937년 4월 46살의 나이로 운명한다.

《옥중수고》는 파시스트 감옥의 검열을 의식해 씌어졌으므로 일종의 암호와 같은 말들로 가득하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는 ‘실천철학’이라는 말로, 혁명적 당은 ‘근대 군주라는 말로 대체돼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스탈린주의적 이탈리아 공산당은 《옥중수고》를 일부 발췌해 출판할 수 있었고, 나중에 《옥중수고》가 훨씬 더 많이 출판된 뒤에도 유로코뮤니즘*적 개혁주의자들과 포스트모더니스트 교수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해계모나’ 개념은 혁명적 변혁의 불가능성을 설파하고 선거 중심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또 학술연구, 문화연구, 미디어 연구 등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는 데 이용됐다. 그람시 연구는 신그람시주의라는 이름의 매우 보수적인 학풍이 여전한 특색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의 혁명적 진수를 재발견하고 있는 매우 급진적인 경향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람시를 재발견해야 한다.

파업 준비하는 건설 노동자들

건설 현장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강철구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6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슈퍼갑인 건설 자본가들의 횡포에 피 빨리며 죽어 나가” 왔다.

불안정한 고용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도 모자라, 상승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린다.

건설 노동자 95퍼센트가 체불 경험 이 있다. 건설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설기계 노동자 38만명의 체불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칼만 들지 않았지 낱강도 같은 건설 자본가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듯 건설 노동자들에게 쥐야 할 쥐꼬리 만한 퇴직금조차 강탈해 왔다.

대형 건설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노동자 1인당 하루 4천 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실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쥐야 할 퇴직금을 도둑질해 갔다.

한국 건설 노동자는 영국 건설 노동자보다 11배나 더 많이 산재로 사망한다. 하루에 2명 꼴로 죽어 나간다. 그런데, 살인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건설 자본가들은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건설 노동자 40명이 폐죽을 당한 이천 냉동창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본가는 겨우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 50만원을 냈을 뿐이다.

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을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은 물론이고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전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아주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즉각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도를 즉



장소: 서울 강북구 선릉역 인근
날짜: 2013년 6월 28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중단시킬 힘을 발휘해 요구를 따내자. 5월 28일 파업 선포 결의대회.

각 법제화해야 한다.

퇴직금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도 하루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건설 현장 체불 문제 해결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가동시간, 임금 지불에 대한 사안, 사고 발생시 처리 기준 등이 명시돼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또, 건설노조의 요구대로 동절기 등 비수기 생계비 지급, 적정 임금 및 임대료 제도 도입,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 적용 등을 보장하는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실현하려면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건설 노동자들은 올해 곳곳에서 전진

하고 있다.

5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가 승리한 데 이어, 6월에는 울산건설기계 레미콘분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 관련기사 14면

특히,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지역 전체 목수들에게 적용되는 임단협을 적용하기 위해 투쟁했다. 지난 1년간 조합원이 대폭 늘어났고, 노조의 영향력과 힘이 증대됐고 노동조건도 크게 개선됐다. 이주 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 노력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는 대구경북지부의 모범적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번 파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건설노조 지도부 공언대로 하루 파업을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 비조합원들도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

또, 플랜트건설노조 지도부는 6월 27일 전에 지부별 임단협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파업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연대해 위력적 힘을 보여 준다면 실질적인 양보를 쟁취할 수 있다.

건설노조의 파업은 대규모 공사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

201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사 현장,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동두천과 울산의 화력발전소 등 대형 국책사업 현장과 전국 1천2백곳 건축 현장에서 공사차질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오만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건설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자.

파업에 동참하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건설 현장에서 50퍼센트 이상 주요 공정을 차지하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는 진행될 수 없다. 건설노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70퍼센트 이상이 조직돼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007년 48일간 전면 파업을 벌여 임금삭감 없는 주44시간 노동을 쟁취한 데 이어, 2010년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시작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올해 7월부터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가 의무화된다. 2003년 태풍 매미로 52대의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는 등 그동안 와이어가잉 방식으로 타워크레인을 고정시키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가 의무화되면 안전사고가 줄어들 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 더 많은 타워크레인을 세워야 해 노동자들의 고용도 늘어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불법 개조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무자격자들에게 타워 조종을 맡기고 있다. 위험천만하게도, 경량타워크레인은 무인 조종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 작업을 중단하는 강풍 기준 강화와 10퍼센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동원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자.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의 제1장은 기업 규제 완화와 기업의 성장이 우선임을 밝히고 있다. 철저히 자본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드맵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일자리를 쪼개거나, 임금을 더 주지 않고도 더 오래 일하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네덜란드가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최근 판 베첼 네덜란드총 대표는 “극도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고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네덜란드 모델’의 실체를 폭로했다.

박근혜의 로드맵의 주요 내용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를 통해 특히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에게 ‘일하고 싶으면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에나 만족하라’는 말일 뿐이다. 이미 여성 노동자 6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남성의 60퍼센트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많이 편입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내 차별적인 지위가 더 악화될 것이다.**

강요된 ‘선택’

현재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시간제 일자리의 92.3퍼센트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투자를 강제할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실사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전일제 노동자와 같아진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전일제 노동자도 기본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저임금 구조 속에서, 시간

제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평생 시간제 일자리에 머무르려 하겠는가. 따라서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것일 수밖에 없다.

사실 로드맵은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임금·인사·승진에서 차별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청한 사람들은 육아 부담 속에서 시간제 일자리라도 감수해야 했던 여성과 일부 하위직급 노동자들뿐이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여성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여성에게 육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본분이 육아와 가사노동이고, 여성은 저임금을 받아도 되는 부차적인 노동력일 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실제로는 여성 노동이 경제전체와 가족의 생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여성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받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원한다.

질 좋은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보육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고자 보육 예산을 늘려 왔으나 턱없이 부족했고, 주로 민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실패 재탕하기?

그러나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시설은 보육의 질이 낮고 온갖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 이런 보육 시장화 정책에 현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겨우 5.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또, 여성들이 육아기에도 유급 휴가를 차별 없이 쓸 수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비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고 출산 후 원래의 업무로 복직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남성들이 육초가 되도록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활이 유지되는 구조로는 남성과 여성의 동

등한 육아 부담이 몹시 어렵다.

무엇보다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만 한편에선 전일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필요한 돈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 위기인데도 2012년 3분기에 상장회사 1천6백44곳의 내부유보금은 8백32조 원이나 났다. 최근 조세도 피처를 통해 빼돌려진 한국 자금이 8백조 원이 넘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런 돈을 노동자들을 위해 쓰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은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구직자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요구다.

최미진

맑시즘2013에서 ● 오늘날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김영익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로 최근에 높아졌던 동아시아 긴장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시진핑과 오바마가 만났을 때도 꽤 큰 기대가 일었다.

그러나 중·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해 보이던 걸모양과 달리 알맹이가 없었다. 사실 핵심 쟁점(사이버 해킹,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양국은 실질적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이견만 확인했다.

심지어 중·미회담 직후 미국은 다오 위다오(센카쿠) 점령 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섬 탈환 훈련을 일본과 함께 진행했다. 중국의 훈련 취소 요구를 간단히 무시한 것이다.

해킹

최근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들도 시사적이다. 그는 “NSA가 2009년 이후 홍콩과 중국의 표적 수백 건에 대해 해킹을 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첩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중·미 갈등과 동아시아 불안정은 쉽사리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前)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베이징에서 전문가들은 중·미 관계의 정확한 상태를 정의하려고 애쓴다. 그중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중·미 관계는’ 열전(hot war)도, 냉전(cold war)도 아니다. 차라리 싸늘한 전쟁(chilly war)에 가깝다.”

즉, 오늘날의 중·미 관계가 제2차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의 관계, 또는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의 관계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 긴장과 경쟁이 상당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 당장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려는 건 아니다. 중국도 자국이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미국보다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을 안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 질서를 과거 냉전 때처럼 초강대국들에 의해 나누어진 양 진영의 갈등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두 제국주의 국가는 경쟁 관계에 있고, 이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온다.



알맹이 없이 끝난 중·미 정상회담 걸으로는 웃으면서 돌아서서는 칼을 갈고 있는 자들.

더구나 지금의 중·미 갈등은 경제 위기 속에 경제적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리는 양상을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최근 ‘아시아 권력망의 부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나라들의 안보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나라들이 중국의 부상을 보며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일본·호주·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 정보 공유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이 가장 위

협해 보인다. 아베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베트남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자위대에 영해 경비 권한을 줘, 센카쿠(다오위다오) 등에 투입하려 한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해 상륙 훈련과 섬 공격 훈련 등을 벌이고, 서태평양 원양 훈련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시진핑은 지난 중·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의 ‘뒷마당’ 라틴아메리카를 순방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려 애썼다. 그 이후 중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니카라과 운하를 건설해 1백년간 운영할 권리를 확보했다.

물론 아시아로 ‘귀환’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는 요소도 많다. 우선, 미국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로 국방 예산을 대거 줄여야 하는 처지다.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과 이란 문제 등을 다루고 아랍 혁명에

맞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도 역량을 상당히 쏟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과거에 견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미국 제국주의는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며 세계 패권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힘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맑시즘2013에서

▶ 정전협정 60년 :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동아시아 불안정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맑시즘2013
MARXISM

대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 - ‘전략적 인내’라는 땀방

얼마 전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은 중·미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격’ 문제는 빌미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격’을 꼬투리 잡은 데다가, 막판에는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얘기를 꺼내려고 했다. 사실상 북한이 회담을 포기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간 셈이다.

결국 북한 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 즉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잘 되기가 힘든 것이다.

북한이 거듭 대화를 요구하며 비핵화와 회담 형식 등에서조차 양보할 수 있다

고 밝히지만, 미국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처지인 미국한테 북한은 여전히 좋은 핑계거리다.

미국은 심지어 강도 높은 제재로 북한의 목을 더 죄려 한다. 6월 10일 미국 상원은 향후 5년간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발

미국의 대화 거부와 제국주의적 압박은 다시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과 호전적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도 미국이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국까지 합세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핵을 포기시키거나 붕괴하게 만

들 수 있다는 냉전 우파들의 생각은 위험천만한 몽상이다. 중국까지 가세한 유엔 대북 제재가 발효됐을 때 북한은 더 호전적 맞대응을 택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는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 등을 신경 쓰며 자신의 중동 패권이 흔들리지 않게 애써야 한다.

이런 처지에서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커지는 것을 마냥 방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사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오가더라도, 위기와 긴장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제국주의 패권 추구와 갈등이라는 근본 요인이 여전히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노동운동은 한반도 불안의 진정한 원인이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의당 지도부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진보정의당은 지도부는 한반도 긴장의 주된 책임이 제국주의에 있다는 점을 별로 말하지 않고 ‘종북’ 공세에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운동진영 일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우파의 안보 논리에 타협하면서, 안보 쟁점을 이용해 우파를 결집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와 핵 보유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런 관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시리아 혁명을 망치려는 서방 제국주의

서방 개입은 독재에 맞선 투쟁을 위협한다고 주디스 오어가 전한다. 주디스 오어는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타도를 목표로 반군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한 이후, 요르단-시리아 국경 지역에 미군이 배치되고 있다.

오바마는 아사드가 ‘사란’이라는 신경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리아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시리아 혁명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영국 정부 또한 군사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 금수 조치가 지난달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G8 회담에 모인 세계 정상들은 시리아 개입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혁명에 고무돼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나선 시리아 민중에게 서방 제국주의 정권들의

공격적인 군사 개입은 재앙과도 같다.

“열렬한 사자”라는 합동훈련을 핑계로 미 해군 3백 명이 시리아 국경에 배치돼 있다.

“열렬한 사자”

페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24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로 무장한 비행함대도 요르단 북부로 이동했다.

이는 아사드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러시아를 대놓고 도발하는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G8 회담에서 아사드를 지원할 의사를 다시 표명했다.

시리아 혁명은 2011년 개혁을 바라는 평화로운 운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아사드의 잔혹한 탄압 때문에 유혈낭자한 전투가 벌어졌다.

아사드의 군대는 지난주에 레바논 접경 지역 쿠사이르에서 반군은 성공적으로 진압한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 정부는 이제 북부 알레포의 저항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오바마와 영국 정부는 자신들의 개입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북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직 이라크와 아

프가니스탄의 악몽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저들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성장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분파를 저항세력 안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

시리아 혁명은 점점 제국주의 세력의 장기판이 되고 있다.

독재에 용맹하게 대항하는 시리아 민중과 그들의 투쟁이 제국주의 세력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58호 / 번역 이진화



서평 | 전면 개정 증보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꼭 읽어야 할 “보석 같은” 사회주의 입문서



전면 개정 증보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존 몰리뉴 원작, 최일봉 편집·번역, 책갈피,
280쪽, 13,000원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생생한 불평등을 목격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 한편에 맨해튼의 고층 건물들로 상징되는 기업 자본의 천문학적 부와, 다른 한편에 미국 사회의 실패와 냉대로 말미암은 완전한 타락이 지척에서 공존했다. …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상반된 현상이 나란히 존재할 뿐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 착취와 소외로 얼룩진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나는 사회주의자가 됐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실린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의 한 대목이다.

존 몰리뉴를 사회주의자로 만든 자본주의의 현실은 거의 50년이 흘렀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끔찍해졌다.

2008년 경제 위기는 이미 힘든 사람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기만 한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치솟는 전·월세를 따라가기조차 버겁다.

그나마 직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청춘을 바쳐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시간제 정규직’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벌이가 안 된다며 공공병원을 폐쇄하고, 철도·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도 죄다 민영화하려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한숨 쉬고 있는데 신문에 나오는 소식은 눈을 의심케 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투자한 돈이 무려 8조 3천억 원, 부자들이 조세 도피처로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8백조 원.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갑자기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독재자의 딸을 쫓아내면 될까?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면 될까? 조금씩 개혁을 추진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한다. 그런데 정말 자본주의 말고는 대안이 있을까? 사회주의? 좋기는 한데 이미 실패한 모델 아닌가? 인간은 이기적인데 평등한 사회가 과연 가능할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는 이 모든 궁



전 세계 10억 명이 판자촌 신세 자본주의에서 주택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생긴다. 강남 포이동 판자촌과 타워팰리스.

금중에 속 시원히 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예를 들어, 인간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몰리뉴의 설명은 간단명료하다.

“오늘날 세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생산성을 자랑할 만큼 풍족하다. 그러나 유엔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 9억 6천3백만 명이 기아와 아사 공포에 시달리고 매일 약 2만 5천 명이 기아나 기아 관련 질병으로 죽어 간다.

기아와 아사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일까? … 오늘날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매일 3천5백 칼로리씩 제공할 수 있는 밀과 쌀 등 곡물이 생산된다.

“교통수단이 문제일까? … 폭탄을 실은 폭격기들은 지구 어디든 날아간다. 그런데 식량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이들 수천 명이 굶어 죽든 말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 … 유엔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또 옥스팜과 세이브더칠드런처럼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국제 구호단체도 많다.

“[진정한 원인은] 식량이 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라는 사실, 시장에서 판매해 이윤을 얻려고 생산되는 상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 기아 문제를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즉, 식량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저 잘 분배하기만 해도 이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은 없을 것이다.

“굶주리는 아이가 더는 없을 것이다. 영양실조로 불룩 튀어나온 배도, 생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쳐다보는 눈빛도 사라질 것이다. … 오늘날 인간이 겪는 엄청난 고통은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는 이처럼 쉽고 명쾌하게 사회의 다른 문제들, 즉 우리가 왜 월요일을 싫어하는지, 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지, 자본주의 경제는 왜 끊임없이 위기에 빠지는지 등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솔한 왜곡과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정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 준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는 2005년 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인터넷 서점에 한 독자는 다음과 같이 서평을 남겼다. “사회주의를 가장 올곧게 서술하고 있는 책! 사회주의의 검색하면 나오는 온갖 스탈린주의 잡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책!”

이 전면 개정 증보판은 존 몰리뉴의 최신 칼럼들을 대거 추가해 초판을 ‘혁명적으로’ 개편했다. 초판보다 분량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보석이 발하는 빛도 두 배로 밝아졌다.

뒤뜰린 이 사회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바라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슈퍼갑’에 맞서 싸우는 ‘을’들에게 이 책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미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독자라도 초판보다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이 많이 추가됐으므로 꼭 다시 읽어 보길 권한다.

이승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몰리뉴는 맑시즘2013에서 ▶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 **마르크스주의와 철학** ▶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를 주제로 연설합니다. 맑시즘2013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16면에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줄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근 여러 대학에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다. 중앙대, 청주대, 배재대, 국민대 등 곳곳에서 취업률 낮은 기초학문, 어문계열, 예술계열 학과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대신, 취업률과 기업선호도가 높으리라 기대되는 학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한글학자 주시경과 시인 김소월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던 배재대는 국문학과를 통폐합하고 프랑스어문화학과와 독일어문화학과를 폐지했다. 대신, 사이버보안학과와 항공승무원학과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봄부터 대전과 충청지역은 구조조정 광풍이 불고 있는데, 대전지역 사립대 중에 독문학과와 철학과는 아예 사라질 정도로 인문학은 찬밥 신세다.

중앙대는 2010년 18개 단과대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와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올해 갑자기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가족복지학과 폐과 계획을 내놨다.

중앙대 두산 재단이 폐과를 추진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 벌어지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기업 논리에 찌들

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앙대 재단은 “1백만 원 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분야의 전공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계열 학과들을 폐과하려 한다. 언젠는 “아이가 미래다”라는 공익광고까지 만들더니, 정작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회복지 분야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대학에서 취업률이나 임금 수준을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는다. 이는 정부가 대학 평가 기준에서 취업률을 중요 지표로 삼기 때문이고, 대학 당국들도 경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지표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취업률이나 저임금이 노동자들이나 학생들 탓인가? 낮은 취업률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해고를 일삼고, 일자리를 창출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올해 대기업의 40퍼센트가 신규채용을 줄일 계획이라면서 왜 어떤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구조조정 대상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취업률과 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과들에

대해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이유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과하는 것은 학생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교수들도 자신의 제자들을 제대로 취업시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교육의 욕을 상실하곤 한다.

돈벌이

그럼에도 대학 당국들은 이런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개별 대학들은 기업처럼 행동한다. 오로지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그리고 대학 순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끊임 없이 경쟁한다.

정부는 대학을 기업들에게 고급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학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시켜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긴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심해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지배자들과 정부는 저비용으로 고급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커졌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부실’ 대학을 선정하는 경쟁을 부추겨,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단지 정원 축소나 대학 퇴출뿐 아니라, 교수들에 대한 업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에 경쟁 논리를 더욱더 강력히 도입해 왔다.

이런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될 듯하다. 이명박 정부 때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취업률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대학들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평가 기준을 약간만 바꾸고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목표 중 하나로 내놨다. 기업들이 원하는 고급 인력에 비해 대학 졸업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할 때 핵심 근거로 삼는 내용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하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다.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이윤 논리를 앞세워 대학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 대학 교직원들의 노동조건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당장에는 막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저항이 곳곳에서 있었다. 올해도 인하대, 원광대, 중앙대 등에서 항의 행동과 점거 농성 등의 투쟁이 벌어졌고, 인하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도 했다.

구조조정에 맞선 운동을 강화하려면, 한편에선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면서도, 곳곳에서 투쟁하는 경험들을 확산하면서 자신감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캠퍼스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저항으로도 연결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정병호

맑시즘2013에서

▶ **대학 기업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 더 많은 정보는 16면에

맑시즘2013
MARXISM

현대차 임단협 투쟁

투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의 부족함을 채우자

현대차에서 3월부터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특근 거부 투쟁은 불충분한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여전히 긴 노동시간, 노동강도 강화)을 보여 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물론 현대차 사측으로서는 노동시간을 일부 줄이고 노동강도는 높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최종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도 찬성이 과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조합원들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불충분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나? 현재 조건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었다. 현대차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백10시간 정도 줄어든다. 밥샘노동도 사라졌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최대한 가동시켜 “노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 귀적 갈등”(마르크스)을 해소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무분규 3년”을 뚫고 파업을 벌여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했다. 당시 사측은 파업 손실액이 1조 5천9백44억 원이라고 안절부절했다. 이를 통해 불충분하나마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된 것이다.

게다가 불충분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애초에 ‘3무’(임금 하락·노동강도 강화·노동유연화 없는)와 평일 8시간 노동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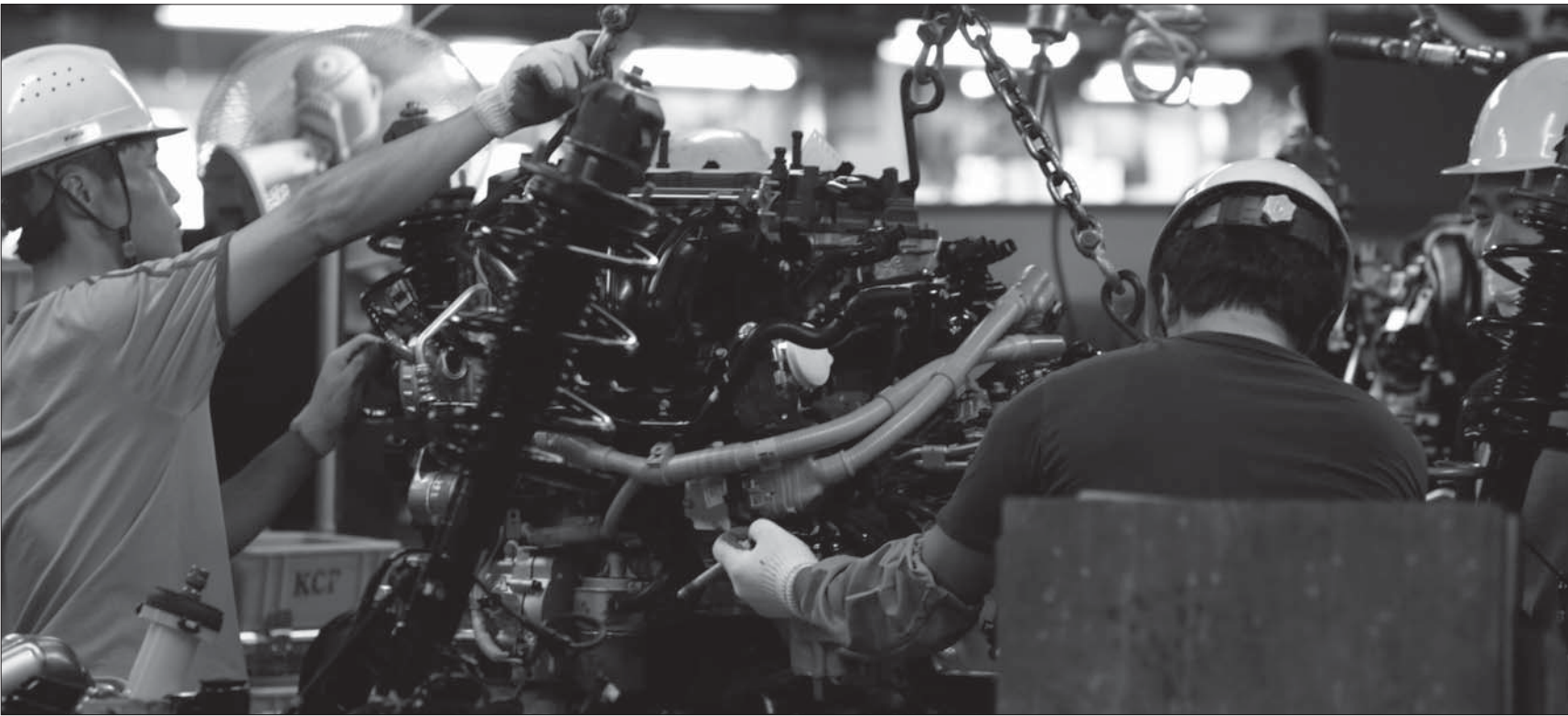
3무

사측은 펄쩍 뛰었고 보수언론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더 달[란다]”며 노동자들을 뻔뻔한 ‘노동귀족’으로 몰아세웠다.

이런 ‘흡혈귀’ 같은 사측과 싸우려면 더 단호하게 맞아야 했다.

하지만 문용문 지도부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철저히 부분 파업 중심으로 힘을 제한했다.

‘노조 양보론’, 양보교섭도 문제였다. 슬금슬금 3무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차 노동자들.

결국 문용문 지도부는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는 사측의 압력을 수용했고, 2조(오후) 노동자들은 한 시간을 더 일하게 됐다. 노동강도도 강화됐다.

이런 후퇴는 불가피하지 않았다. 사용

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사용했는데도 역부족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지난해 투쟁은 그렇지 않았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지금도 노동시간 단축 열망이 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넘

게 벌어진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은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올해 임단협 투쟁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완성해야 한

다. 기본급 대폭 인상, 평일 8시간 근무, 특근 폐지 등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김기선

공동의 적에 맞서 현대·기아의 공동투쟁으로!

6월 20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임금 요구안 상정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한 달 보름 만에 마무리됐다.

예전과 비교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현장을 정비하고 투쟁을 준비한다면 2013년 투쟁이 승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현대·기아차지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평일 8시간 노동 주간연속2교대 즉각 시행(지금은 오후 근무 노동자들은 9시간을 일한다)과 2012년에 대폭 양보한 노동강도 강화 조처 철회, 완전한 월급제 시행이다.

둘째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지부 모두 평일 8시간 노동 주간연속2교대 즉각 시행 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15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는데 이는 현

장 조합원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현장의 투사들이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 즉각 시행과 완전 월급제 쟁취, 기본급 대폭 인상 요구를 못할 이유는 없다. 요구안의 틀에 갇혀 현장 조합원들의 진정한 바람을 저버리는 것은 큰 실수일 것이다.

바람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요구는 예년보다 진일보했다. 특히 기아차지부는 임단협 별도요구안(20가지 중) 1번으로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결정하고 대의원 전체의 투쟁결의를 했다.

또한 5월 초 대부분의 현장조직들이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매주 수요일 현장순회, 양재동 집회 참여, 공동홍보물 발행 등의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조직 명의만 올려놓고 실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보수적 조직인 ‘혁신’은 선별적 정규직화가 대안인 양 공동투쟁에 탄축을 건다.

더 많은 활동가들의 참여를 조직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아차 화성공장은 수요일마다 많게는 40여 명에서 적게는 20여 명이 꾸준히 현장순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대의원대회도 끝난 만큼 실질적인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역시 철탐농성과 노숙농성 부분파업 등을 벌이며 투쟁의 시동을 걸자 중단됐던 특별교섭이 다시 시작됐다.

이런 분위기를 살리려면 정규직 활동가들의 실질적인 연대가 관건이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투사들

과 한몸이 돼 자신감을 불어넣고 선두에 서서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적, 정몽구를 향한 공동의 투쟁이 중요하다. 부족하나마 주간연속2교대가 도입된 것도 현대·기아차지부가 공동투쟁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2년 투쟁 막판에 기아차지부 지도부가 보인 미온적 태도 때문에 현대차지부가 2013년 투쟁에서 공동투쟁에 힘을 싣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도부의 실수와 잘못된 행태를 핑계삼아 공동의 적을 향한 공동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현대·기아차 현장 투사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더디더라도 아래로부터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하자!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자체 생산 업체 엠에스오토텍 파업

1백70여 명이 현대차까지 마비시키며 승리하다

경북 경주에 있는 차체 생산 업체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여 통쾌하게 승리했다.

사측은 6월 20일 파업 이틀 만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민주노조를 인정했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보장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배경에는 노동자들이 이를 가는 “진짜 악독한 회사”가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엠에스오토텍지회 최지욱 사무장과 손관협 부지회장의 말을 들으면 그 악독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10년 전에는 한 개였던 공장이 지금은 네 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비정규직만 늘렸습니다. 노동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노동시간도 길니다. 12시간 맞교대인

데,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임금은 이 지역 부품업체 가운데 가장 낮아요. 10년 근속자 임금이 다른 곳 초봉과 비슷합니다.

“사측은 노동자동의 없이 전한배치하고, 인원 감축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부당하고도 몇 번 했습니다. 고용 불안이 심합니다.

“겨울에 추워도 회사는 기계만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는 제대로 된 난방 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추우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계만도 못한 거죠. 또 일하고 있으면 관리자들이 뒤에 와서 감시하고 일하는 시간을 쪼입니다.”

노동자들은 **홍물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해 함께 파업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 계급으로 단결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나쁜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당연히 분노가 높았다. 한 이주노동자는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경찰에게 “우리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응수했다.

사측이 부랴부랴 대체인력을 투입했지만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파업 이틀 동안 엠에스오토텍에게서 차체를 공급받는 현대차 울산공장 차체 라인까지 대부분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노동자 1백70여 명이 벌인 파업이 한국 경제 핵심 사업장을 들췄다 놓은 것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이틀간 확대간부 파업을 벌이고 사측의 공장 봉쇄를 뚫는 데 앞장서는 연대의 모범을 보였다.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정규직 사이에서도 연대를 모색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투쟁이 ‘악독한’ 사측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김지태



이주노동자 30여 명도 노조에 가입시킨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10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파업으로 승리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공장을 멈추니까 회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 레미콘 회사 16개 중 9개 회사 노동자들이 73일 동안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10년 넘게 거의 동결됐던 운송료를 3천 원 인상했고, ‘노비문서’라 불리던 도급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투쟁의 발단이었던 대원그룹 레미콘 노동자 80명의 해고도 철회시켰다.

레미콘 노동자 투쟁을 이끈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장동기 총분회장** (사진)에게 이번 투쟁에 대해 들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조 만들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일했지만 회사가 먼저 1천 원이라도 인상안을 낸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다른 문제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대원 그룹은 레미콘 노동자 80명을 하루아침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총분회는 4월 3일부터 9개 회사 모두 동맹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대체차량을 저지했습니다. 용차 기사들에게 “같이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 불만이 있는 용차 기사들이 우리에게 협조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고

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파업해도 회사가 용차를 투입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차와 우리가 모두 서니가 공장이 멈춰 버렸습니다. 회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기계 5대 기종 노동자들은 85퍼센트가 찬성해 연대 파업을 네 차례(하루 파업 2회, 5일 파업 2회) 벌였습니다. 이런 파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기종 노동자들에게 연대했습니다. 이런 연대 투쟁 덕분에 다른 기종 노동자들도 사측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레미콘 회사들은 적어도 피해를 수천억 원 봤습니다. 파업으로 공장을 세운 것 자체가 큰 파괴력을 낳았습니다.

연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를 뛰어 넘어 연대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회사 노동자들에게도 함께하자고 할 겁니다.

진보 정당과 여러 시민 단체들의 연대도 중요했습니다.

지역과 전국에서 연대 투쟁을 벌이면 얼마든지 투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지태



5월 15일 건설기계 5대 기종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삼성에 맞선 투쟁

“노조 가입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지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 회장한테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집단 노조 가입에 관한 통쾌한 소식을 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항의를 준비한 노동자 두 분이 ‘서비스 건수별로 임금을 책정하고 고객과의 통화도 본인이 지불하고 월 1백50만 원 정도의 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조건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사측이 해당 센터의 노동자 30명을 모두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죠. 이에 노동자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1백여 명이 노조 가입서를 보냈어요. 일명 ‘바지사장’이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을 불러서 ‘노조 가입하면 끝장난다’고 협박하는데, 노동자들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가입서

를 보낸 노동자들과 통화하면 한결같이 ‘우리 처지는 주유소 알바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다른 삼성 노동자들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싸워서 우리도 덕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삼성의 하청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관심이 각별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의 해외 비자금 이 폭로됐는데, 그 돈이 바로 우리의 피와 땀입니다.

2007년에도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비자금 6천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부품들을 중고로 교체하고서 재무제표에는 정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료, 유류세, 식대, 고객과 통화하는

휴대폰 요금마저 떠넘기고, 고객센터 만족 확인 전화에서 만점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는 반성문까지 쓰게 했습니다.

삼성지회는 예상되는 회사 탄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동대책위를 조직했고 근로감독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조 가입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어서 지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다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되고 있어요.

전체 삼성지회 조합원들이 모두 모여서 얼굴 보고, 집회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여진

※ 조장희 부지회장은 앞서금2013에서 “슈퍼갑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앞서금2013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16면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에 맞선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이 일부 살아나고 지배계급의 부패와 비리, 성추행, 국정원 대선개입 등 추잡한 면 얼굴이 드러나면서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회피하며 땀소리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며 여전히 틈을 노리고 있다. 노조 설립신고를 요청한 공무원노조에도 “해고자를 상임집행부에서 제외시켜라”고 회유하며 분열을 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박근혜는 그 틈을 타 공격하려 들 것이다. 기층의 자신감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노동운동 상층단위의 분열도 여전히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공격할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 지도부는 6월 24일 현재, 교원노조법 개정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이다. ILO 총회에 참석해 법외노조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 하기도 했다.

나아가 기층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으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선언(이하 ‘현장선언’)을 확대 건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난 6월 1일 교사대회에서는 2시간 만에 1천1백53명이 ‘현장선언’에 동참했다. 일부 전·현직 지부장과 집행부들도 ‘현장선언’에 함께했다. 6월 13일 수도권 집회에서도 주요 활동가들의 3분의 2가 ‘현장선언’에 동참해 1천2백 명을 넘어섰다.

이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성장하



6월 1일 전국교사대회

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전체 조합원으로 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전교조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6~7월에는 일제고사·학교성적급 등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진다. 학교 성적급은 도입 후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로 집중 반납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투쟁 경험을 되짚어 보면, 경쟁교육 폐지는 전교조가 정부에 맞서 굳건히 싸울 때 가능했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도 해고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기 때문에 성취한 것 아닌가.

따라서 일제고사·성적급 반대 투쟁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과 결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끝으로, 일제고사·성적급, 그리고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선 전교조 운동은 전체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고,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조수진 전교조 전국 대의원

KT의 노동탄압 항의 투쟁

“목숨 던져 고발한 현실을 바꾸고야 말 것”

얼마 전 사측의 부당한 임단협안 찬반투표 개입과 노동탄압을 폭로하며 KT 전남본부의 한 노동자가 자결했다. 유서를 통해 폭로된 KT 사측의 선거 개입 행태는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관리자들은 투표 때마다 개별면담을 해 “반대표를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다” 하며 찬성표를 강요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괴로워한 김 조합원은 결국 목숨을 바쳐 이 부당한 현실에 항거한 것이다. 유서의 마지막에는 “15년간의 KT사측의 노동탄압이 이제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나도 올해 KT 임단협안 찬반투표 때 있었던 사측의 부당한 개입을 폭로하며 싸우고 있다.

지난 5월 임단협에서 KT 노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노조가 사측에 임단협안을 ‘백지위임’한 것이다.

사측에 칼자루를 넘겨 버린 대가는 혹독했다. 각종 수당 폐지와 계약으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고, ‘상시적 정리해고제’라 할 수 있는 면직제도가 도입됐다. 회사가 맘만 먹으면 수백여 명을 매년 퇴출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를 비롯한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은 이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반대투표를 호소했다. 나는 투표 전날에야 개최된 설명회에서 면직제도의 부당성 등을 폭로했다.

안타깝게도 82퍼센트 찬성으로 합의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내가 속한 은평지사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반대표 던져

찬성률이 57퍼센트였다.

관리자들은 낮은 찬성률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 자료가 사측의 실수로 나에게 보내졌다.

“가협정안 설명시 이원준이가 직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여 ... 반대 여론몰이를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유로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음.”

이는 노동조합법상 명백히 금지된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를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 외에도 온갖 지저분한 부정투표의 정황이 여기저기서 폭로됐다.

명백한 증거자료를 입수한 나는 이를 근거로 이석재 회장과 은평지사 수석팀장, 지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보고자인 수석팀장은 적반하장식으로 ‘해킹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KT노동조합 선거에서 회사의 부당 개입과 부정은 여러 차례 폭로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전남본부 조합원의 자살을 통해서 KT 사측의 불법 선거 개입과 노동자 탄압에 대한 공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민주동지회는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저녁마다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김 조합원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바랐던 염원을 관철해 내고야 말 것이다.

이원준 KT민주동지회 회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10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르노삼성 노동자 투쟁

고용 불안과 악화된 노동조건에 맞서 부분 파업을 시작하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구조조정예 항의해 급속노조 르노삼성지회가 부분 파업을 했는데, 올해도 르노삼성 사측이 노동자들을 계속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지난해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르노삼성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8백7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말이 희망퇴직이었지, 사실상 강제로 쫓아낸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 5월 산업자원통상부가 낸 '5월자동차산업동향'을 보면 르노삼성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생산량이 21.1퍼센트 줄었다. 그래서 또다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불안이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희망퇴직으로 노동자가 줄어 노동강도가 강화됐다.

“현대차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딱 두 배 정도로 일하더라. 현대차에서 두 사람이 할 일을 우리는 한 사람이 한다. 라인 타다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본 일도 있

다.”(이동현 르노삼성지회 수석부지회장) 유럽에 기반을 둔 르노는 유로존의 심각한 위기 때문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르노닛산 회장 카를로스 곤은 2016년까지 7천5백 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책임이 없다.

살인적 노동강도, 삼성식 노무관리, 억압적 현장 통제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에게 르노삼성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전가하려 한다.

급속노조 지회를 견제하려고 지난해 파업 이후 등장한 기업노조조차 올해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은 것이다. 두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94퍼센트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에 맞선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허수영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내놔다. 올해 들어서만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들의 노동강도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다.

이는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신규채용 인원을 원래 1백3명에서 3백 명으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도 현장의 노동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 국가가 지방정부 인력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은 45퍼센트가 늘었고, 복지대상자 수는 1백57퍼센트가 늘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고작 4.4퍼센트 늘었다. 일은 매우 많이 늘었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37.9퍼센트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수준'이다. 자살 충동을 느낀 비율도 27.4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무려 세 배나 된다. 일반 국민은 7.1퍼센트만이 '직장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62퍼센트가 '직장 문제'로 자살을 고민했다.

당장 대규모 인력채용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죽음 행렬

서울시가 신규채용을 세 배나 확대했지만, 이는 동주민센터마다 1명도 안 되는 숫자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해 올해만 복지대상자가 4만 명 늘어난다. 복지 확대는 좋은 일이고 더 확대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부족한 인력을 시급 4천8백60원의 비정규직 4백75명으로 메우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확대

하는 꼴이다.

국가가 지방공무원 인원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OECD의 발표를 보면 한국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무려 복지예산의 71.2퍼센트를 지방정부가 지출한다. 중앙정부가 일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인력 채용은 총액인건비제로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만연한 것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이다.

이 틀 안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연이은 죽음을 해결하려 한다면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2000년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던 때 박원순은 “법이 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영원히 우리를 속박할 것”이라며 “악법이 법일 수는 없다”고 했다. 총액인건비제가 바로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독자토론광장

7월 10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노동자에게 ‘맑시즘2013’을 ‘강추하는 이유

올해도 어김없이 대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3’이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 “맑스”라는 단어는 한물 지났거나 불운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여론조사를 보면 인류 역사상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맑스”는 늘 상위에 꼽힌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임금, 고용안정, 복지 문제로 항상 자본과 대립각을 세운다. 그런 시기에 1년에 한 번 나올간 열리는 ‘맑시즘’ 참여는 노동자들에게는 커다란 투

쟁의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한다.

초보 노동자에게는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노동조합의 전략과 전술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을 수 있게 하고, 전투적인 노동자에게는 사회변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요즘 조종동, 종편, 일베충들의 보수주의 담론이 판을 치는 가운데 ‘맑시즘’ 축제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올 여름 진보 최대의 축제 ‘맑시즘’을 노동자들에게 ‘강추’한다.

이영길 한전KON 노동자

병원 노동자들의 “웃음 뒤의 눈물”

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그냥 언제 어디서든 뭘해도 “죄송하다”고 한다.

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많은 서비스직이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병원 노동자는 특수하게 ‘환자’를 상대하며 일한다.

매일 힘들고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힘들다. 하녀 부리듯 부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받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려 간호사에게 푸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무리한 요구나 행동을 하더라도 간호사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줘야 하기에, 환자를 위로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참아내야 한다는 직업적 윤리를 강하게 요구받는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설명

이나 검사나 치료 과정 등이 늦어지면 모든 책임 추궁과 화풀이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간호사에게 쏟아 낸다.

폭력적인 행위나 비인격적인 말을 해도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친절하고 더 조심하라고만 요구한다.

내 가족이나 본인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는 과다한 업무로 정작 환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병원 노동자들의 웃음 뒤의 눈물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혜린 간호사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땃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이유로 무수한 탄압을 받아 왔고 지금까지 ‘단결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8년 광우병 사태 시국선언, 2009년 세 개 공

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때 모두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2009년 9월에는 보수언론들이 무려 3개월 동안 11개의 사실과 칼럼에서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갔다. ‘정치세력화’를 내세우는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곧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어기는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선관위, 통계청 등 많은 중앙부처 소속 지부 탈퇴를 선동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진짜로

‘정치중립’을 어기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부였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왜 그토록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는지도 명백해졌다. 공무원노조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이런 통계 조작과 왜곡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어기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통계를 조작했다.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싸우다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을 전원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중북부지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귀족'이 됐는가?
연사 : 김문성(레프트21) 기자
일시 : 6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4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000원(청소년 1,000원)
문의 : 010-9820-5698

서울 동부지구
긴축정책,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 경제위기
연사 : 김어진(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6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2층 3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 3,500원(학생 2,500원)
문의 : 010-7707-9637

서울 서부지구
사회양극화 시대,
협동조합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연사 : 강동훈(레프트21) 기자
일시 : 6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한국여성노동자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뒤편
참가비 : 3,000원(학생 · 청소년 2,000원)
문의 : 010-7725-9823

브라질 민중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다

“무엇을 반대하냐고요? 무엇을 반대하지 않냐고 물으셨어야죠.”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가한 한 청년이 언론에 한 말이다. 이 말은 브라질 민중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이번 시위를 촉발한 것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경찰 폭력이었다. 이는 곧 커져이 쌓여 있던 분노와 울분의 짙 더미에 불을 당겼다.

아래로부터 압력이 얼마나 거센는지, 시위가 일어난 일주일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에게 운동에 나설 자신감을 더 줬을 뿐이다. 요금 인상 계획이 철회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20일, 브라질 곳곳에서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 브라질은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다. 노동자당은 1970~80년대 파업 물결 속에서 탄생했고, 2002년에는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했다.

노동자당 정부는 빈민 대상 사회복지를 일부 도입했지만 더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최상위 부자들의 부는 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격받았다. 불평등도 여전히 심각하다. 여기에 부패 추문도 계속 터졌다.

2010년 대선에서 노동자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경제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도 괄찬은 성적을 내고 빈민 구제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정부는 내년에 열릴 월드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기장을 고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오죽하면 브라질 사람들이 “학교와 병원이나 FIFA(국제축구연맹) 기준에 맞게 지어라” 하고 외칠까.

즉, 신자유주의, 불평등, 부정의, 노동



사진 출처: Gmish (블라카)

커져이 쌓인 분노가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다 브라질 민중처럼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자당의 배신 등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위기 심화 속에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도 브라질 사회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거리의 투지가 한때 강력했던 노동운동과 만난다면 그 폭발성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과 함께 신흥공업국의 모범으로 불렸던 브라질의 저항은 유럽과 아랍에 이어서 터키를 지나 계속 번져 나가는 투정의 희망을 보여 준다.

차승일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선 퍼디

6월 17일 브라질에서 시위대 수십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항의했다.

이번 시위는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6월 13일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였다.

활동가들과 언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경찰은 시위대, 기자, 행인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최루 가스나 고무총탄을 발사했다.

한 사람은 고무총탄을 맞고 한쪽 눈을 잃었다.

경찰 탄압과 주정부와 시정부의 비타협적 태도에도, 지난 3주 동안 대중교통 무상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섯 번 있었다.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의 대중교통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비싸다.

브라질 노동자당 등 주요 정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자라고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서 사용될 축구장 개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쓰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천 명이 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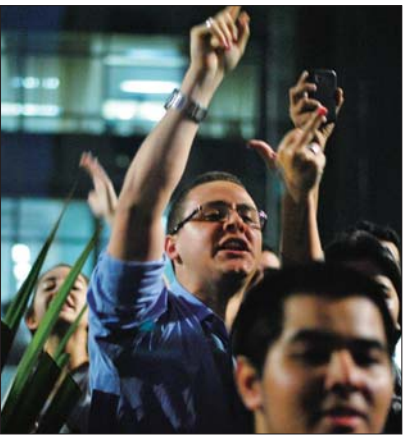


사진 출처: Thiago Bile (블라카)

서 쫓겨난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자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자당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무상화 운동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당의 많은 기층 활동가들은 극좌파 정당인 사회주의와자유당의 투사들과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58호 / 번역 최민혁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집권 후 노동당이 우경화하자 좌파가 탈당해 2004년에 창당한 정당.

13년째 열리는 대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

마르크스주의 MARXISM

7월 19일(금) - 22일(월) / 장소 : 고려대학교 /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동아시아 불안정
강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전쟁발발) 저자

● 군사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반자본주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교 교수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한겨레출판) 저자

● 민영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박석운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자본연대 공동대표
최영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자 연대
이남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설 <레프트21> 기자

● 협동조합운동은 사회 변화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가
나성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책위원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 '슈퍼 갑' 상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이종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창희 금속노조 경지부 상성지회 부지회장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최유희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리사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해탈파 저자

● 김수행 교수가 말하는 '자본주의 이후'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한울아카데미) 저자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해탈파 저자

● 교육 위기 극복: 교육 노동자로서의 교사가 만들어 가는 학교 그리고 수업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아니즘과 자율주의
존 몰라뉴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사회주의의란 무엇인가)해탈파 저자

● 유로존 위기와 저항 그리고 좌파의 대안
장석준 친노동당 부대표
(신자유주의의 탄생)해탈파 저자

차승일 <레프트21> 기자

● 새로운 세대를 위한 레닌 가이드
전지은 <레프트21> 기자

●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백은진 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 성폭력과 여성 차별
최미진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
※ 50여 개 주제와 연사를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휴대전화 010-4909-2026(문자 가능)

이메일 marxism@marxism.or.kr

※ 참가증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facebook.com/marxism.or.kr
@marxismtwit